

---

**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 
서민금융법 개정 방안**

---

**2020. 2.**

**금 융 위 원 회**

## I. 추진배경

□ '08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,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자금을 공급

○ 그간, 총 459.2만명에 대해 총 49.2조원을 지원('19.12월말)하여 저신용자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옴

□ 그러나, 한시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상품 출시하고 수차례 운영기간을 연장\*하는 등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해옴

\* 햇살론 : (1차) 총 1.2조원 조성, '10~'15년 운영, (2차) 총 1.8조원 조성, '16~'20년 운영

□ 정책서민자금은 저신용자를 보호하는 금융안전망으로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·안정적인 공급이 필요

○ 서민금융분야 內 정보비대칭·시장실패\*로 서민의 금융애로는 상시적이며, 서민자금의 초과수요도 만성적인 상황

\* 정보부족 등으로 서민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여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거나 높은 비용(금리) 부담이 불가피

○ 개별 금융권 상황, 전반적 경제여건 등에 따른 여신관리 기조 변경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민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측면

⇒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지속가능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근본적인 재원구조 마련이 필요

□ 한편, 현행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'소멸시효 완성'을 요건으로 함에 따라 제도가 경직적이고, 오히려 고객 보호에 불리한 측면

○ 투자자예탁금 등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확장이 어렵고, 소멸시효 중단 가능성으로 인해 고객 찾아주기 활동에도 소홀

⇒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'고객 재산보호' 관점에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통합 관리·반환하는 제도로 개편

## II. 금융기관 출연제도 개편

### ◆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 확대 및 출연 상시화(정부출연과 매칭)

- (출연 금융기관 확대, §47②) 현재 상호금융, 저축은행 → 은행, 보험사, 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쏘금융권으로 확대\*

\* 쏘금융권을 포괄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

- (출연기준 이원화, §47②·③) 출연은 ①가계대출에 비례한 공동출연금과 ②보증잔액에 비례한 업권별 차등출연금으로 구분

※ 세부 출연기준, 출연요율, 출연절차 등은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

※ 정부도 향후 5년('21년~'25년) 동안 연간 약 1,900억원 추가 출연

## III. 휴면금융자산 출연제도 개편

### ◆ 소멸시효와 무관한 '장기미거래 금융자산'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

- (출연대상 확대 및 용어 변경, §2-ii) 기존 출연 대상 금융자산 (예금, 보험금, 자기앞수표발행대금, 실기주과실) + 투자자예탁금 등 추가

- 다양한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종전의 '휴면예금' 용어를 '휴면금융자산'으로 변경

- (휴면금융자산 정의 정비, §2-ii,iii) 금융자산별 만기·최종거래일('기산점')로부터 일정기간('미거래기간') 고객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금융자산으로 정의(※소멸시효 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)

#### < 금융자산별 휴면금융자산 정의 >

구분	기산점	미거래기간
예금	만기	5년
수시입출금식 예금	최종거래일(입출금, 잔고증명서 발급)	5년
보험금(만기, 환급금)	만기(청구권 발생일)	3년
자기앞수표 발행대금	지급제시기간 만료일	5년
투자자예탁금	최종거래일(입출금, 잔고증명서 발급)	10년

□ **(대고객 통지의무 강화, §42의2)** 이관 전 금융회사의 對고객 안내 강화

\* 금융회사의 고객 반환노력을 유도하고 충분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자산으로 한정하여 이관함으로써 고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

① **(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통지)** 미거래기간 지속시, 서금원에 이관될 수 있다는 점을 미거래기간 도래 최소 6개월 전에 안내

② **(휴면금융자산 이관 통지)** 서금원 이관 1개월 전, 이관 예정일 및 이관 후 반환절차 등에 대해 통지(현행과 동일)

\* 휴면금융자산이 10만원 이하인 경우, 권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제외

□ **(이관효과, §41·§43)** 이관일로부터 고객에 대한 휴면금융자산 반환 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부담

① **(금융회사)** 이관일로부터 해당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보관·관리·반환의무 등을 면제(§41④)

② **(고객)** 고객은 금융회사가 아닌 서금원에 대해, 이관 휴면금융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보유(§43)

③ **(서민금융진흥원)** 이관받은 휴면금융자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(§1·§3·§39)하고, 권리자에게 반환할 의무(§43)

- 이자·수수료 등은 서금원이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(일부예외 可)

□ **(휴면금융자산 주인 찾아주기 활동 강화, §44)** 서금원에 대해 휴면금융자산 반환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·시행 의무 부과

□ **(휴면금융자산 관리 투명성 제고, §45의2)** 금융회사·서금원에 대해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 공시의무 부과

※ 국민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통합 공시 가능(§45의2③)

□ **(휴면금융자산 원본 사용 제한, §40③)** 권리자 반환 청구권 보호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원본 사용을 제한

## IV. 서민금융진흥원 계정구조 · 지배구조 개편

◆ 재원관리의 투명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 
계정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

### 1. 계정구조 개편

- ① (휴면금융자산 관리계정 정비, §40) 휴면계정에서 각종 서민 금융사업을 분리(→자활지원계정 이관)하고, 휴면계정은 반환 등 권리자 보호활동에만 사용

\* 휴면자산 관리와 사업수행간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음을 감안

- ② (자활지원계정 신설, §55의2) 휴면금융자산 원본을 제외한 모든 재원\*을 통합 관리하고, 취약계층 지원사업 수행\*\*

\* 휴면금융자산 운용수익금, 기부금, 정부출연금 등

\*\* 미소금융, 전통시장대출, 미소금융컨설팅, 미소드림적금, 소액보험사업, 취업지원 등

- ③ (시장보완계정 정비, §46) 사업 성격\*을 반영하여 명칭을 종전의 '신용보증계정'에서 '시장보완계정'으로 변경

\* 민간 서민금융시장을 보완하여 일반적인 저신용층을 지원 사업 수행  
→ 금융권·정부 매칭 출연금 재원으로 햇살론17 등 신용보증상품 운영

### 2. 지배구조 개편

- (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, §20의2) 휴면위 위원장은 진흥원장의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,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

○ 휴면금융자산 관리제도에 금융권 참여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협회 2인을 추가(금투협 1인, 여타 업권 협회장 중 1인)

- (운영위원회 대표성 제고, §9)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권에 민간위원 추천권(2석)\* 부여

\* 출연 규모 순으로 상위 2개 업권 협회에서 추천

---

## V. 기타 주요 개정사항

---

- ① **(사업수행기관 지원 방법 구체화, §26)** 사업수행기관의 손실부담 능력, 업무수행능력 제고 위해 운영비지원 등 지원방법 다변화

\* 자금대출, 운영경비, 교육·연수, 법률자문, 전산지원 등

- ② **(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, §29의2)**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\* 및 센터 운영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

\*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

- ③ **(자료요청권 구체화, §81)** 서금원·신복위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범위, 정보제공요청 대상 등을 구체화

\* 휴면금융자산 관리자에 대한 통지의무(§42의2) 이행 목적으로 금융회사도 이용 가능

- 서민금융 이용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격요건, 소득·재산 증빙 자료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

- ④ **(잔고 이전계좌에 대한 거래중지, 부칙§5)** 법 시행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휴면금융자산이 개정법에 따라 진흥원에 이관된 경우,

- 빈 계좌가 대포통장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중지 계좌로 편입하여 관리

\* 법 시행일 이후 개설 계좌의 경우, 이관과 동시에 계좌를 자동해자중지토록 약관 개정 추진

---

## VI. 향후 계획

---

☐ 입법예고 및 부처의견조회 : '20.2.21일~4.1일

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 제출 : 6~7월중(예상)

**1. 영국 : Dormant Bank and Building Society Accounts Act (2008)**

- ☐ (적용 상품) 은행 및 건축조합(building society)의 예금계좌
- ☐ (휴면계좌 정의) ①15년 이상, ②계좌 보유주의 지시에 따른 거래(transaction)가 없는 계좌
- ☐ (관리 주체) FCA의 인가를 받은 민간기구인 ‘청구기금’(Reclaim Fund)이 이관 받아 관리
- ☐ (이관 절차) 청구기금과 금융회사의 합의하에 이관
- ☐ (이관 효과) “고객의 권리행사 대상”을 청구기금으로 변경
  - 고객은 해당 계좌 잔고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(금융회사 의무 면제), 금융회사에 행사할 수 있었을 어떠한 권리라도 청구기금에 행사할 수 있음

**2. 일본 : 민간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휴면예금 등에 관련된 자금의 활용에 관한 법률(2019)**

- ☐ (적용 상품) 예금기관의 일반 예금, 적금, 결제용 예금 등
- ☐ (휴면예금 정의) ①최종거래일\*로부터 ②10년 경과한 예금
  - \* 고객의 이용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입금, 출금, 지급청구, 정보제공청구 등의 거래가 있었던 마지막 날
- ☐ (관리 주체) ‘예금보험기구’가 이관 받아 관리
- ☐ (이관 절차) 최종거래일로부터 9년 경과시 고객통지(1만엔 이상)·공고 후, 공고일로부터 2개월~1년 이내에 이관
- ☐ (이관 효과) 휴면예금 이관시, 예금자의 원채권은 소멸(消滅)
  - 예금자는 예금보험기구에 대해 채권의 원본 및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새롭게 보유